

전남개발공사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 (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)

전남개발공사

전남개발공사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 (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)

I. 평가목적

- 기업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인권경영체제, 고용·노동권, 산업안전, 공급망, 현지 주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

II. 평가내용

- 사업추진절차 상 발생할 수 있는 인권리스크를 토대로 ① 용지 취득, ② 택지조성, ③ 보건안전 등 현장근로여건, ④ 기타 잠재적 이슈, ⑤ 문화적 영향 ⑥환경권 보장, ⑦ 권리구제 절차 보장, ⑧ 자금조달에 대해 평가함

III. 평가위원

- 내부위원(5) : 경영본부장, 사업본부장, 전략기획실장, 감사실장, 노조위원장

※ 경영본부장 평가 미실시

- 외부위원(6) : 인권전문가(3), 협력업체(1), 지역주민(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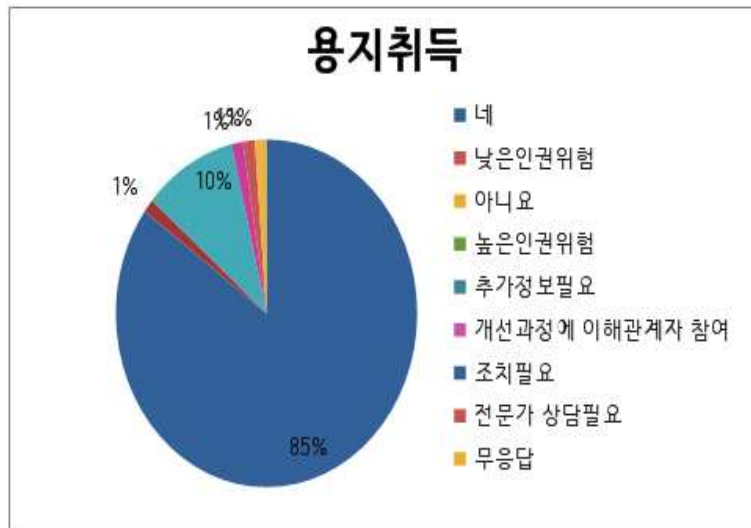
IV. 평가결과

1. 용지취득

-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에 대한 적법 보상 및 이주가 발생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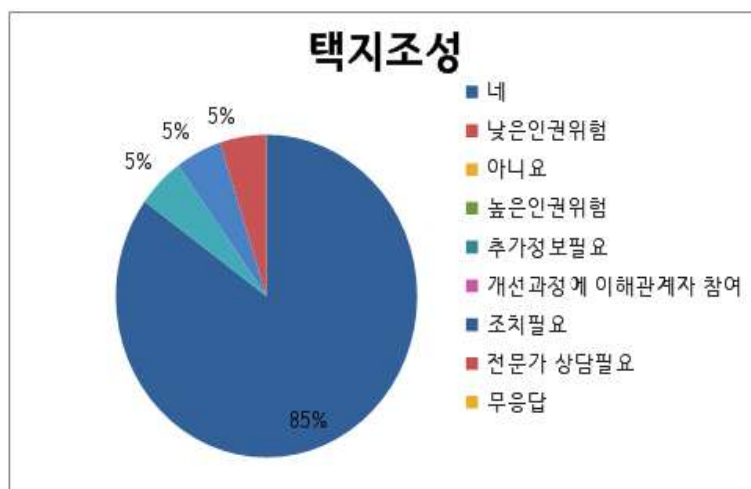
에게 이주대책 수립 등 용지 취득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에 대해 평가함

- 평가결과 85%는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용지취득을 적법하게 추진하였다고 판단하였고, 10%가 추가 정보를 요청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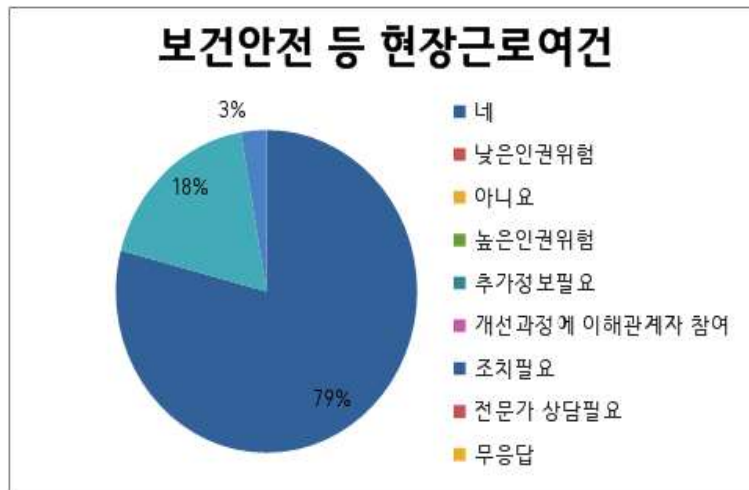
2. 택지조성

- 택지조성이 지역의 물리적 또는 경제적 접근성,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에 대해 평가함
- 평가결과 85%는 오룡지구 택지조성시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, 추가정보 및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10%는 평가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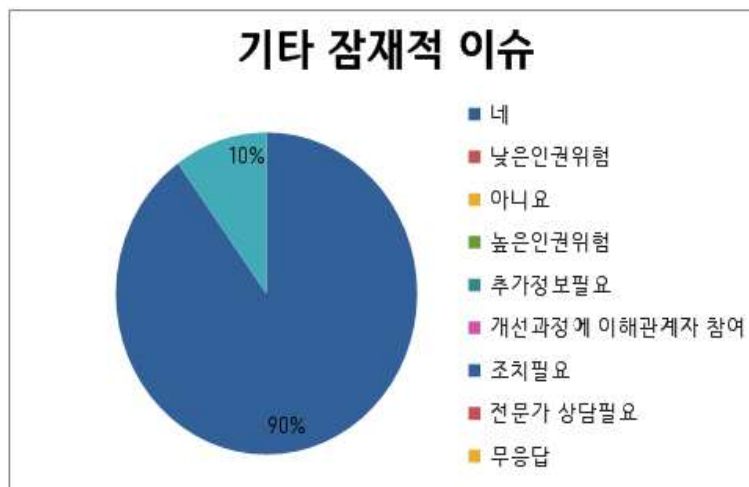
3. 보건안전 등 현장근로여건

-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 공사 시 현장근로자에게 보건, 안전 등 교육을 실시하고, 근로자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지에 대해 평가함
- 평가결과 79%가 보건안전 등 현장근로여건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고, 18%가 추가 정보를 요청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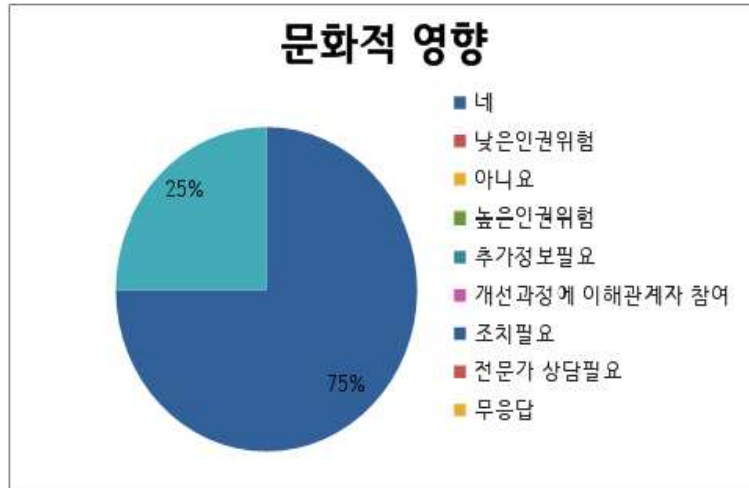
4. 기타 잠재적 이슈

- 사업현장 책임자의 언어, 신체적 학대 및 괴롭힘, 근로자 불만 및 고충처리 마련에 대해 평가함
- 평가결과 90%가 사업책임자가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고, 10%가 추가 정보를 요청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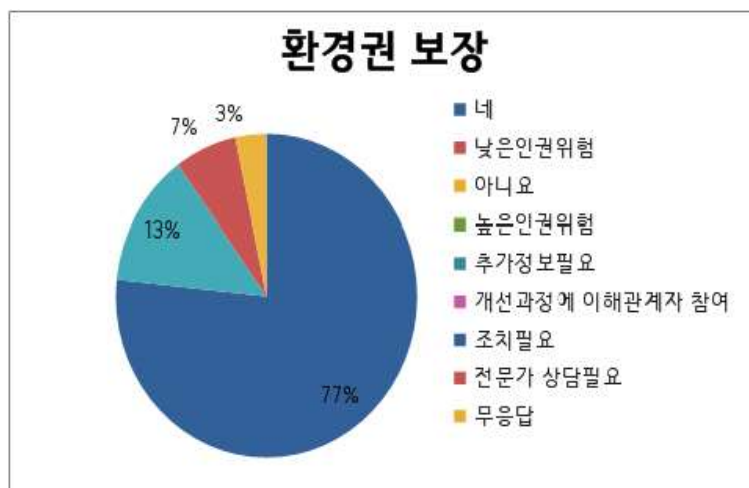
5. 문화적 영향

- 오룡지구 사업지구 내 지역사회에 중요한 문화적 가치 존재 여부, 문화재 지표 조사에 대한 적법여부에 대해 평가함
- 평가결과 75%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 문화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고, 25%가 추가 정보를 요청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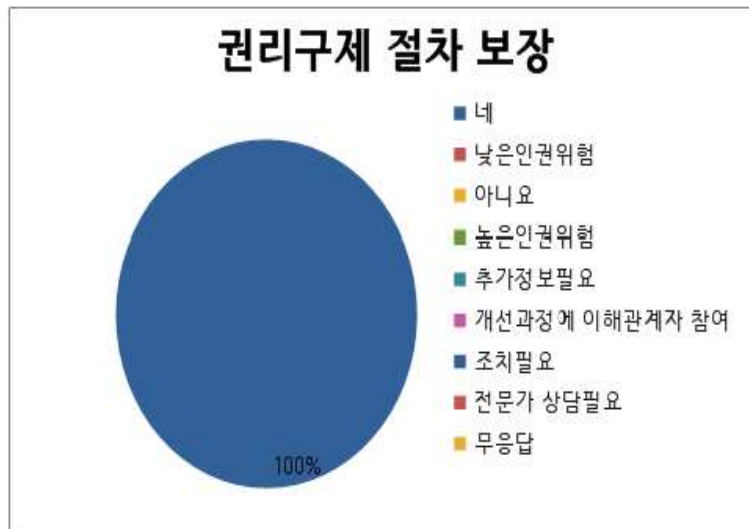
6. 환경권 보장

- 오룡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환경, 교통, 재해 등 영향평가 실시 여부, 택지조성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지에 대해 평가함
- 평가결과 77%는 환경영향평가 등 제 영향평가를 완료함으로써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고, 13%가 추가 정보를 요청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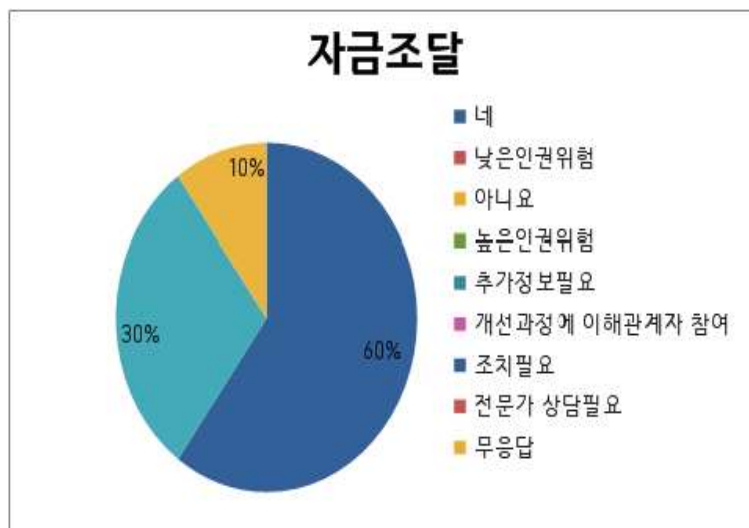
7. 권리구제 절차 보장

-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신청 청구, 행정적, 사법적 구제절차에 마련되어 있는 지에 대해 평가함
- 평가결과 권리구제 절차가 100%마련된 것으로 평가함



8. 자금조달

- 오룡지구 사업수행시 필요한 자금조달이 적법한 지, 은행 및 증권사 등 자금조달과정에서 인권위험요인 존재여부에 대해 평가함
- 평가결과 60%는 자금조달에 인권위험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고, 30%가 추가 정보를 요청함



V. 결 론

- 오룡지구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가장 높게 평가된 항목은 권리구제 절차보장으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용지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손실 보상을 실시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신청 청구, 행정적, 사법적 구제절차가 100% 마련된 것으로 평가함
- 반면, 조성 공사시 보건안전 등 현장근로여건 파악, 자금 조달 분야 등 외부위원의 경우 추가정보필요로 답한 경우가 다수 존재함
- 향후 인권영향평가 시에는 주요사업의 추진절차, 이슈사항 등 사업안내 선행후 평가실시하며, 내실있는 인권영향평가를 위해 평가기간을 연장하고, 충분한 자료 제공 및 평가위원들의 현장 평가를 병행하는 평가제도 개선 필요